

## 충청권 공동발전의 의의와 성공과제<sup>1)</sup>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민선4기 지방자치체제가 출범하면서 대전·충북·충남을 포괄하는 충청권에는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충남은 이미 전국 1위의 산업투자와 생산, 수출 증대 및 외자유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대전과 충북은 각각 대덕R&D특구와 오창·오송 첨단의료 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과학과 첨단기술의 메카” 및 “경제특별도”로서의 비전 실현을 가시화하고 있다. 21세기 국가발전의 동력원이 산업화를 선도했던 수도권에서 점차 첨단기술과 산업생산을 주도하는 충청권으로 이전되고 있다. 충청권은 이제 싹든 좋은 국가발전의 선도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청권내 3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모여 “대전·충남북 경제협의체” 구성을 주창한 것은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차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충청권은 역사적으로도 수세기 동안 동일한 행정·문화권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지역주민들은 강한 정체성과 연대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충청권은 산업과 도시기능차원에서도 상호 보완과 연계성이 높다. 충남은 국제항만과 대규모 첨단생산, 물류 및 교역기능을 갖춘 반면 충북은 국제공항과 바이오, 첨단의료산업을 갖추고 있다. 대전은 과학·기술개발 및 대도시집적경제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간 경제, 사회, 문화교류 또한 활발하여 상생과 공동발전의 효과가 어느 곳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급격한 공간적 재편과 기능적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충청

1) 이 글은 중도일보 (2000. 3. 12. <월>)에 게재된 내용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권 3개 시·도의 경제협의체 구성이 단순히 지역간 갈등 해소나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 증진이라는 차원을 넘어 21세기 국가발전과 지역구조 변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지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역사, 문화적 전통 및 고유한 발전 잠재력 등이 동불능자원을 지닌 도시와 지역의 중요성은 커지게 된다. 세계화시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은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와 지역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육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OECD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대규모의 “초 광역적 지역경제권”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제항만과 공항, 과학기술과 R&D 센터, 첨단산업생산거점과 인구 500만 명의 집적경제기반을 갖춘 충청권이 기존의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생과 협력 및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충청권이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권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충청권의 상생과 공동발전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 및 전략의 수립과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적 수준의 “초 광역적 경제권” 형성이라는 뚜렷한 비전과 현실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합의와 신뢰기반을 형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해관계가 중첩된 지역간 상생과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 내 기업인, 금융기관 등 경제와 산업계,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대학과 전문가 집단 상호간 교류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3개시·도 경제협의체의 운영을 통하여 기업지원 서비스의 개선, 개발의 시너지 효과 향상,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상생과 공동발전의 필요성과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적 경험의 축적과 신뢰기반의 형성 없이는 지역간 협력과 공동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간 협력과 상생노력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실천이 용이하면서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해결하려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충청권의 상생과 공동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예산 및 제도수단과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많은 지역간 상생과 공동발전 노력이 지속성을 지니고 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이를 전담할 상시적 인력과 조직, 예산 및 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새겨야 할 때다.